

# 與 “이제는 백신 속도전...야간접종·주말접종도 검토”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백신 점검단 회의에서 김성주 백신점검단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백신 점검단 2차 회의를 갖고 백신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민주당은 화이자 백신 추가 계약으로 99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며 공급 논란 확산을 차단하는 한편 “이제는 백신 접종 속도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신 수급단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제는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다. 신속, 안전, 책임이라는 접종 3원칙에 따라 보다 빨리 더 많은 접종이 안전하

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은 (백신) 접종센터 확대에 따른 필요 의료인력 대책을 요구했고, 백신이 전국에 적기에 공급되도록 일방체계를 점검했다”며 “접종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직장인, 부모를 동반한 접종자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야간접종, 주말접종 등 다양한 방식의 접종을 확대하는 등 속도를 높일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최근에는 주중에 일과 시간에만 접종이 이뤄졌다. 75세 이상 접종자가 자녀나 가족

을 동반해 접종을 하는 경우 자녀가 직장 다니면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주말 접종을 최근에 추가했고, 야간 접종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예정된 접종대상이 나타나지 않아 백신을 버릴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예비 대상자 명단을 미리 확보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접종 기간에 주변 사람들이 접종을 하도록 하는 것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를 했다”고 부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접종 후 이상반

## “이상반응 신속조치 위해 긴급지원제도 등 활용” “확진자수와 접종자수 동시에 국민에게 알릴 것”

응에 대해서는 “피접종자와 의료진이 충분히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래서 환자, 의료진 통보 안내를 강화해 조기 대응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일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해서 백신 접종을 멈출 수는 없다. 미국, 유럽도 이상현상을 발견하고 일시 중단한 적이 있지만 내용을 확인하고 바로 접종을 재개했다. 특히 실보다 크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상 반응과 부작용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대응, 선제적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은 신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긴급 지원제나 재난지원제도 등을 활용해 우선 지원한 후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당은 정부에 백신수급과 접종계획, 접종현황을 상세히 알릴 수

있도록 요청했다.

김 의원은 “매일 중대본을 통해 전날 확진자수, 사망자수가 보고되고 있는 것처럼 전날 접종자수도 동시에 상세하게 국민에게 보고되도록 할 것”이라며 “오는 6월까지 전국민의 25%, 접종대상의 3분의 1인 1200만명에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가로 계약한 화이자 백신은 오는 3분기 이후 도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계약한 백신의 수급 우려와 관련해 “화이자 경우 현재까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 없고, AZ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국제적 백신 수급 상황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안심해도 좋다”고 말했다.

러시아나 중국산 백신 도입 논의와 관련해서는 “기본적 입장은 어느 나라가 생산한 어느 기업의 백신이라

고 해도 안전성,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된다면 도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판단 자료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고, 백신을 도입하려면 공급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생산에 따른 공급 시기가 그렇게 빨리 가능하지 않은 게 고려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김 의원은 “화이자 백신이 추가 확보돼 전체 9900만명분, 총 1억9200만회분으로 전 국민이 4번 맞을 수 있는 분량의 백신을 확보했다. 더 이상 백신 공급을 둘러싼 논란은 중단돼야 한다”며 “이제는 백신 속도전이다. 순서와 계획에 따라 백신 접종을 이루는 게 중요한 목표”라고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정부는 이달 말까지 300만명의 접종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이고, 6월 말까지 1200만명에 대한 접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바백스, 모더나, 안센 백신 일부를 상반기 내 추가 구입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 추미애-이상민 '외눈' 설전 “언론 편향 지적” vs “명백한 비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외눈'은 장애인 비하 표현이 아니라 언론의 편향성을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백히 비하한 것이고 차별적 언동”이라고 반박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접두사 '외-'는 '혼자'의 뜻도 있지만, '한쪽으로 치우친'이라는 뜻도 있다”며 “외눈은 시각 장애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며 장애인 비하는 더더욱 아니”라고 적었다.

앞서 정해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 전 장관의 외눈 표현에 대해 “명백한 장애인 비하 발언”이라고 비판했고, 이상민 민주당 의원도 “적절한 지적”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추 전 장관은 “장 의원과 이 의원은 문맥을 오독해 제 뜻을 왜곡한 것”이라며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폐지됐선 안 된다는 점은 애써 외

면하고, 팩트체크는 관심없이 노골적으로 정치하는 언론들이 득세하는 이 상황에서 일부러 그러는건지 장애인 비하로 폄하해 매우 억지스럽게 만든 것도 유감”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그러자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우할 가치가 있다 싶었지만 다음과 같이 애써 몇 가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첫째, '외눈'이 국어사전에 있음을 근거로 비하 표현이 아니라 했는데 그러면 '절름발이', '난장이' 등도 국어사전에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편향성이란 부정적 의미에 외눈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므로 명백히 비하한 것이고 차별적 언동”이라며 “잘못을 지적받았는데도 계속 억지 주장을 하는 건 옹고집일 뿐 지혜롭지 않다. 얼른 시정하고 사과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스

## 2030세대 잡으려는 野...“가상화폐 투자자 보호해야”



국민의힘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30세대 민심 잡기에 한창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26일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에 목소리를 높였다.

가상화폐 과세 및 거래소 폐쇄 가능성 시사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향한 젊은 층의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야당은 2030세대에 공감을 표하며 정부를 향해 날을 세우는 모습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가상화폐 문제를 놓고 정부여당이 우왕좌왕 결구를 못잡고 있다”고 질타했다.

주 대표대행은 “가상화폐 투자자가 2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진 마당에 실제 국민 자산이 얼마나 가상화폐 시장으로 유입됐는지조차 파악하

지 못하고 있다”며 “투자자는 보호할 수 없다면서 소득에는 과세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에 2030 청년들이 어처구니없는 배신감과 억울함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소득에 로또 당첨금 수준의 과세를 하고 거래소를 폐지하겠다고 엄포만 놓을 게 아니라 제도화할 것인지,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대표대행은 “우리 국민의힘은 당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 제도에 대한 여러가지 연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법을 강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에서는 권은희 원내대표가 나서 “2030세대의 가상화폐 열풍은 정부의 25번의 부동산대책의 실패로 벼락거지가 된 좌절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발언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당 최고

주호영 “정부, 시장도 파악 못해”  
“은성수에 2030 배신감 드러내”  
권은희 “제도권 도입 논의해야”

위원회의에서 “은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 시장을 수수방관하고, 책임을 면할 방법만 강구하고 있다”며 “무능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국회는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 정부의 규제기조와 세계적 기업 활동시도의 흐름을 면밀히 살펴서,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도입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가상화폐업권이 자율적으로 일정한 자산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필요한 정보를 보관·보고하도록 하는 업권법을 마련하여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는 주무부처도 정하지 못하는 우왕좌왕에 책임만 면하고 보려는 태도를 버리고, 변화된 환경과 이에 진입한 2030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 직통전화 010-2400-7774

☎ 주문팩스 062-946-0053